32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 방향

권 진 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 방향

권 진 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01 광장에서 일상으로 : 민주시민교육의 복원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공동체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합의되지 않은 채 매우 모순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명제이다. 민주주의가 일정한 정치체제나 제도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1987년 이행기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완성단계에 올라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는 불의에 맞서 싸웠던 뜨거운 광장의 열기를 떠올리게 한다. 민주주의는 지나간 시대의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연대와 박애 등 끊임없이 재생되어 현대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고결한 어떤 이상적 가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입장들이 공히 놓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상화를 기대하며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나섰고 그 정신을 떠받든 정부가 수립된 지도 어느새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새 정부는 많은 저항과 진통 속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재복원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은 국가의 통치나 '정치사회'에서 발생하는 굵직한 이슈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민주주의의 착근에 관한 것이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시민의 삶 속에서 자리잡는가 하는 문제이다.[1]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민주화(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권위주의적인 퇴행이 이뤄질 수 있으며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시민혁명에 의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모범적인 과정을 역사와 세계 앞에 보여주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의 세대에게도 민주주의적 성취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안겨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

1)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채택한다. 정치교육, 시민참여교육, 시민성교육 등 국내외의 유사한 용어들도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학습)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같은 범주의 개념으로 간주한다.

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거리의 정치와 혁명의 시간을 곱씹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촛불 이후, 익명의 다중들이 모여 광장에서 폭발했던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우리의 생활무대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인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세부과제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꼽고 있다. 이른바 민주시민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02 시민에서 주민으로 :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오늘날의 시민(市民)이 민주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주권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住民)은 특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운영주체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국가나 그 이상의 '체계(system)'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활동과 소통이 이뤄지는 '생활세계(life world)' 차원에서 검토되고 상당수는 해소될 수 있다. "국가는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말이 있다. 주권자이자 구성원이자 납세자인 시민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만 사실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시민의 일상에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대응하는 현대 국가도 일상 생활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좀더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일궈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익히 알려진대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협력과 보완 속에서 이뤄진다. 우선 단체자치의 가치는 보다 높은 대표성을 갖고 보다 하향식 지배를 완화할 수 있는 분권과, 자원배분과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행정효율성이라는 기제가 결합하여 기능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민자치야말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원리에 가장 충실한,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가장 뜻 깊은 제도이자 원리이다. 알렉시스 토크빌의 저 유명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명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이 중심이 되는 단체자치보다는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스리는 주민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민자치는 여전히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방자치는 곧 단체자치를 의미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익히 알려진대로 1987년 민주주의 이행의 결실로 이뤄진 대표적인 성과물이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이호 외, 2018). 특히 단체 자치는 1949년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52년에 시, 읍, 면 선거가 실시되었다가 1960년 5.16 이후 폐지되었다. 이후 군사정권, 권위주의정부 아래에서 예산, 저변 미성숙 등의 핑계로 미뤄지다가 1987년 6월민주항쟁, 6.29선언을 거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의 선언으로 그 부활이 명문화되었다. 이후 3당합당 후 폐지와 정치적 대립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1991

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동시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30여년만에 부활해서 30년이 안되는 경험을 축적한 셈이다.

주민자치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 주민자치는 기존 읍·면·동사무소가 인구분포의 변화, 담당사무의 비효율성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변모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읍·면·동사무소는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의 폐지 건의, 1996년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역할 전환 권고에 이어 주민자치센터로의 김대중정부 시기 시범실시, 노무현정부 시기 본격 전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행정혁신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시설물 관리의 제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의제 협의, 시민교육, 사회형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같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결정은 읍·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 한정된 의제에 대한 의견 제시나 자문 역할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에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중심의 새로운 조직체(혁신읍·면·동 등)이나 '주민자치회'로 변모하며 주민자치 예산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아마 이러한 방향이 진전된다면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민선 또는 민간출신의 읍·면·동장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주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이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민자치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머지않아 지방사무의 결정권 상당부분이 넘어오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적지 않은 주민자치 예산이 투하되는데 정작 살림살이를 해내야 할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의 전환을 앞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풀뿌리단체(현실적으로는 관변단체), 직능별 마을리더, 관련공무원 등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교육이 선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자치교육의 접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책무, 자격과 덕목에 대한 역량을 형성시킴(capacity building)과 동시에 공적인 의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킴(empowerment)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과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주민자치교육의 목표 및 방향과도 서로 잘 일치한다. 또한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학습 방법은, 정부 정책의 일방향적 계도를 뛰어넘는 학습효과를 만든다.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8년 9월에서 11월에 걸쳐 전국 6개 지역(군포, 춘천, 세종, 순천, 대구, 창원)에서 15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위원회 관계자들 3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행하였고, 안산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25개동에서

5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과 형태에 따라 '기초과정' '임원과정', '원탁토론'의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참여 기법과 강의, 사례 전파를 배분하여 진행되었다. 함께 마을의 자원을 탐색해보고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며 지역의 발전 의제에 대한 추진방안, 골칫거리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고민해봄으로써 교육생들로부터 마을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문제 인식,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책무와 자신감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는 피드백이 많았다.[2]

2) 사실 주민자치를 위해 가능한 제도적, 방법론적 수단들은 많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도 매우 중요하다.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발의(제15조), 주민감사(제16조), 주민투표(제14조), 주민소송(제17조), 주민소환(제16조)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39조) 등이 기본적으로 있다(이호 2018). 이 글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03 분화에서 연결로 : 영역, 주체를 가로지르기

시민교육은 시민들의 학습활동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존재양식이자 실천양식이다. 그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의 한 영역이라기보다는 공공성, 민주성, 공동체에의 귀속감, 바람직한 시민의식 등 다양한 모든 교육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담겨있는 본질적인 요소이자 가치이기도 하다.[3]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은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영역과 주체, 이념적 기반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충분히 제도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서 시민교육의 연원은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시민단체들(YMCA 1903년, 흥사단 1913년, YWCA 1922년 등)의 사회교육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이어진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더불어 카톨릭농민회, 크리스찬아카데미, 도시산업선교회, 청계피복노조 노동자교실 등의 학습과 계몽활동이 원형질로서 시민사회 내에서 이어져왔지만 제도로서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조철민, 2018).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양적으로 성장하며 환경교육, 평화교육, 자원봉사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지역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이 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는 기존의 시민교육이 주제와 내용만 바뀌었을 뿐 이러한 사회변화와 복잡한 사회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주입식, 강의 위주, 교육자 위주의 일방적 강의로 구성된 시민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이중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이 심화한 민주시민교육포럼, 민주시민교육실행단체들이 연결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지만 실행주체들의 문제와 사정으로 분절되어버린 '민주시민교육'을 특징짓고 연결하는 중요한 시도가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주요의제로 설정하였고 2010년대에는

3) 교육이념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학계-공공기관, 진보와 보수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가 잠시 결성되기도 했고 정례발표회 형식의 시민교육포럼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한편 시민교육의 영역별 분화도 이뤄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교육은 환경의 변화와 정부 시책에 때로는 조응하기도 하고 극복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분화해왔다. (〈표 1〉 참조) 정부(중앙과 지방)의 학습정책이 국민계몽에서 정부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발전해오는 동안 시민사회 역시 기민하게 협력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면서 고군분투해왔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영역의 생성, 분화 과정[4]

	정부 정책	시민사회단체
제 4세대 (2014년-)	자치 분권, 협치 체계 마련. 사회정책 추진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구상 (마을민주주의) 마을자치와 협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모색(마을정부)
제 3세대 (2000년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결속, 사회적 통합 증진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평생교육법제정(1999년) '평생학습마을 / 도시만들기' (교육인적자원부)	시장논리를 넘어 '협동', '대안'에 대한 운동 풀뿌리자치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돌봄과 교육공동체, 지역화폐운동(LETS), 생협,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주민조직
제 2세대 (1980- 1990년대)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의 사회교육 직업교육과 평생고용가능성 증진 강조(기술변 화에 따른 특정 기술 교육)	공간으로서의 지역운동을 위한 활동가중심의 지역주민조직 전문화, 다양화, 세분화 생산공동체운동, 환경운동, 풀뿌리선거운동, 여성운동, 공부방 등
제1세대 (1960- 1970년대)	자아실현, 사회적응 강조 인문교양 중심의 교육	사회운동의 매개로서의 지역주민의식화교육, 사회운동의 매개로서 지역주민교육이 존재 빈민운동, 농촌운동, 노동운동 등

4) 이필구(2018, 9)를 참조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교육 이외의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서도 지원과 진흥이 되어야 한다.[5]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화 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상이한 방향과 추진체계가 다른 상태에서1997년(15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시민사회, 관련기관, 학계의 의견을 아우를만한 유력한 합의안 없이 법안 통과는 2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평생교육법(2007년 개정), 환경교육진흥법(2008년), 법교육지원법(2008년), 경제교육지원법(2009년), 인성교육법(2014년) 등이 통과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의제별로 분점됨으로써 난맥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거연수원, 통일교육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무부 등이 저마다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면서 본의와 무관하게 민주시민교육이 의제별, 기관별로 분점됨으로써 통합적, 체계적 추진이 쉽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는 법제화의 방향이 특정한 기관이나 기구가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주된 방향이 되고 있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공교육 부문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경기, 전북, 전남, 세종 등 5곳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성남시 등 13곳에서 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시민참여교육'이 6가지 영역의 하나로 명문화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나 진흥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민주시민교육을 배분하기도 하고 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시민참여학습이 0.2%에 불과[6] 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평생교육기관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학습 욕구을 충족할 만큼 인문강좌 중심성이나 운영상의 자율성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평생학습기관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할하기 보다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공공성, 참여기회 확대 등의 요소를 강화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5) 시민교육은 전달주체인 시민사회의 자발성, 창의성과 더불어. 지원주체인 공공부문의 지속성, 안정성이 해당 국가사회의 고유의 특징과 잘 결합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16)의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구축 과정연구"를 참조할 것.

6) 이필구, 2018. 2015년 서울소재 평생교육기관 기준.

04 민주시민교육, 그 유예된 미래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2월 22일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7]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이라는 구호를 내건 이날 출범식에서는 71개 시민교육단체들이 포함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13개 광역단위의 지역네트워크(2개는 준비위원회 형태)가 결성되어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림으로써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의 연결의 의미도 담을 수 있었다. 민주시교육네트워크는 이제 막 첫걸음을 걷게 되었지만,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그려보았다. 물론 민주시민교육의 애당초의 목표와 지향대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필수적인데 해외의 사례를 둘러봐도 참조할 만한 모델들은 이미 존재한다.[8] 그런데 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한 기관이나 세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틀을 살려서 시민들이 활발하게 교육이 제공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일상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해보고, 여러 시민교육의 영역과 주체를 가로지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당장 잰 걸음으로의 진전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걸음씩이라도 이뤄나가는 마부작침 우공이산(磨斧作針 愚公移山)의 덕을 기대해본다.

---

7)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역별 협의체를 기본으로 한다. 시민사회연대회의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의 구축, 영역간의 교류 등의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8) 특히 시민사회가 주된 전달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정당재단(노동이나 종교 운동 등이 결합한) 중심의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성인학습조직들이 촘촘하게 협의체를 이루는 스웨덴의 시민교육위원회가 유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는 공교육의 측면에서 프랑스의 고유한 공화주의 시민교육, 영국의 시민교육 통합교과 구축도 눈여겨 볼만한 사례가 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참고문헌

권진욱. 2015.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후기민주주의로서의 한국 사회복지체계 검토.” 『한국융합인문학』 3(1).

2017.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Issue & Review on Democracy」 No.(15).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2018. 『활동가가 쓴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이필구. 2018. “민주시민교육과 영역별 교육.” 「광장에서 일상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국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자료집.

이호 외. 2018. 「주민자치 현황조사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12. 15. 발간 예정.

우기동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운영 연구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12. 15. 발간 예정.

최현. 2010. “제1부: 한국사회와 시민성.”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최근 흐름과 발전 방향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12
ISSN 2508-3244